



단풍나무 교정의 '가을 여심'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여대생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빨강계 물들이는 단풍나무 아래를 걷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밤 사이 기온이 폭 떨어져 26일 광주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를 기록하겠다고 예보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기초연금 재정 年1000억 덤터기

내년 7월부터 부담액 2배 가까이 늘어 영유아보육료 보조는 '절끔 인상' 반발

26일 발표될 기초연금(기초 노령연금) 정부안이 광주시와 전남도에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 시·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양육수당과 보육료 확대도 지방비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앞선 데 댈진 격으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부담액이 올해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여기에 정부가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가 요구한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20%포인트 상향 조정

있으며, 총 소요 예산만 1064억원(국비 756억원, 지방비 308억원)에 이른다. 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적용할 경우 한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000억원을 넘어서고, 지방비 부담액도 기존보다 300억원 이상이 늘어난 6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은 올해에만 31만4000명에게 3343억원(지방비 545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대상 노인이 1만1000명이나 늘어나면서 32만5000여명이 신설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지방비는 정부안(1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보다 최대 655억원이 늘어난 1200억원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절끔인상'도 건전한 지방 재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부가차지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광주·전남은 정부가 올해부터 0~5세 영유아 무상보육비에 가정 양육수당 등을 추가하는 바법에 각각 182억원과 422억원의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면서 재정난을 겪게 되자 국고 보조금 비율을 현 50%에서 70%로 높

여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10%포인트만 높여 주기로 확정하면서 광주·전남은 올해 기준으로 매년 각각 88억원과 247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재정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 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으니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노인 70%만 매달 10만~20만원

기초연금 정부안...공약 후퇴 싸고 정치권 공방 가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달하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 법률안을 11월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공약 후퇴를 둘러싼 시민사회와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반대로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 정치권은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은 반면,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초연금 축소 논란 등 박근혜 대통령의 잇단 대선공약 후퇴 조짐에 "스스로 약속한 공약을 헛신짜처럼 내팽개치도록 민주당이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도시 지역 9곳에 첨단산단 조성

3차 투자활성화 대책...수도권에 3곳 규제 완화 의식

정부가 수도권 3곳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준공업 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 3곳, 2015년 6곳의 도시 첨단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1개 규모는 20만~26만㎡로, 기존 산단과 비교하면 소규모 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첨단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녹지율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도시 첨단산단 대상지로 첨단 3지구 내 일부 지역이 적합하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 첨단산단이 들어설 경우 국토부가 직접 정부 정책사업으로 지정 개발하고,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에 들어설 첨단산단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유도한다. 정부는 특히 첨단산단에 첨단산업 외에 대학이나 연구개발 시설, 유통판매시설,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도 조성한다.

또 30년 이상된 노후 산단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내년 1차로 6개 노후산단을 선정해 리모델링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곳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계획이다. 광주의 노후산단은 1983년 준공된 송암공단과 본촌공단, 소촌공단, 하남공단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첨단산단 개발계획을

놓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지난 4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담은 수도권경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상태다.

전남대 나주캠퍼스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국토발전 불균형을 초래해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수도권 인근 첨단산단 개발의 경우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SIN UNIVERSITY

임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013 코리아

구례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

구례군 백의종군로 및 구만제 일원

9월 28일~30일까지 (3일간) 본행사 및 부대행사 개최

대회일정 | 9월 29일 07시 부터~24시까지

개회식 | 9월 28일 18시30분 부터(구례군 송원리조트)

부대행사 | 구례대회 참가선수가 2013명량대첩축제 방문 참여시 평화의 헌화 종료 후 F1티켓 지급(선착순 300명)

문의 | 송동하주무관(010-4555-6006)

· 구례 농특산물 장터개장(대회기간내)

주최 | 전라남도 구례군

주관 | 국민생활체육 전남철인3종경기연합회 국민생활체육 구례군 철인3종경기 연합회